

2010. 10. 26

중환경제권 시대의 부상과 국내 철강산업에의 시사점

철강전략연구실

정경희

posco
포스코경영연구소

Executive Summary

중화경제권 시대의 부상과 국내 철강산업에의 시사점

□ 중국은 대만과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로 60여 년 만에 경제적 통일 및 중화경제권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됨

- 지난 6월 29일 중국 중경(重慶)에서 ECFA(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)가 체결됨으로써 중국, 홍콩, 마카오, 대만을 아우르는 중화경제권 탄생. 동남아 화교권 포함 시 범중화공동체 부상 예고
- 범중화경제권 출범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 對중국 의존도 심화 및 동북아 국가 간 FTA 등 경제협정 논의 가속화 촉발

□ 중국은 자국의 서남권 발전과 연계한 경제적 접근 전략으로 동남아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지역을 선점하는 등 주도권 강화

- 지난 10년간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교역 규모는 약 7.8배 증가한 반면 한국은 2.5배, 일본은 1.4배 증가에 그침
- 중국은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, 베트남 등 대륙권 국가 중심의 메콩강 유역 개발계획 투자지원에서 인도네시아 등 해양권 국가 대상의 범북부만 개발협력으로 접근 대상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됨
- 중국은 자국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상하고 이를 통한 중화경제권 확장과 위안화의 기축통화 정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

□ 중-대만 간 ECFA 체결로 對중국 수출물량에 대한 7.1% 관세수혜를 받게 된 대만은 톤당 약 \$51 가격경쟁력 향상 전망

- 10%의 고관세 품목인 STS 박물 및 칼라용 GI 등을 중심으로 한 산 제품에 심각한 타격 우려
- 향후 무관세 품목 확대 시 국내 현지 투자기업의 소재 현지조달 확대 등으로 물량 감소 및 가격 인하 압박이 가중될 전망
- 중국 내 로컬업체와의 공급채널 강화 및 중국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과 병행한 고부가 산업용 강재개발로 value chain 선점



Contents

목 차

I. 중화경제권 시대의 출범	1
II. 중국의 동아시아 주도권 강화 전략	2
III. 국내 철강산업의 중-대만 ECFA 파급영향	4
IV. 시사점 및 대응방안	6

I. 중화경제권 시대의 출범

- 중국은 지난 6월 29일 대만과 경제협력기본협정(ECFA;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) 체결로 60여 년 만에 경제 통일을 이루게 됨
 - 중국은 대만과의 ‘일중원칙(一中原則)’ 하에 정치·군사적 대립과 민간 경제교류가 공존하는 가운데 1994년 ‘대만동포투자법’ 제정으로 대만의 對중국 투자가 활발해짐
 - 2000년 대만 민진당 집권 이후 심화된 양안 간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, 2000~2007년간 연평균 교역증가율이 24% 수준에 달할 정도로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 가속화
 - 대만의 對중국 수출의존도 지속 증가로 2009년도에는 41%에 육박. 2010년 1월 중국-아세안 FTA(Free Trade Agreement)가 발효되자, 대만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중국과의 ECFA를 체결하게 됨
 - 한편, 중국은 ‘하나의 중국(One China)’을 향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게 됨
- ECFA 체결은 중국과 홍콩, 마카오, 대만을 아우르는 중화경제권을 탄생시킴. 동남아 화교경제권까지 포함할 경우,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범중화공동체 부상이 예고됨
 - 중국은 2003년 사스 사태로 경제불황에 놓인 홍콩 및 마카오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CEPA;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을 체결한 바 있음
 - 중국은 홍콩·마카오·대만과의 경제통합으로 인구 14억 규모의 중화경제권을 형성
 - 동남아 화교는 지역 전체 인구의 약 5.5%인 3천만 명에 불과하나 역내 경제의 약 2/3를 차지함
 - 인구 20억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범중화경제권 파워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됨

□ 중화경제권의 출범은 주변국의 對중국 의존도 심화 및 동북아 국가간 FTA 등 경제협정 논의 가속화 초래

- 중국의 對북한 전략은 동진정책 실현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장지투(長吉圖) 선도구 및 신의주 특구 재개 등 경제협력 확대 추진. 또한 나진 및 청진항 사용권 확보로 동해 진출이 가능해짐
- 중국의 對한국 전략은 한반도 지배력 강화 및 한미 FTA 대응 차원에서 한·중 FTA 추진 가속화. 한편 한국은 양안 밀착관계로 인한 최대피해자로 한·중 FTA 체결이 절실한 상황임
- 중국의 對일본 전략은 역내 주도권 확보 및 미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, 대만 등을 경유한 우회접근으로 충돌을 회피하는 한편, 수입 중단이나 희토류 수출 중단 등 경제무기를 통해 주도권 강화

Ⅱ. 중국의 동아시아 주도권 강화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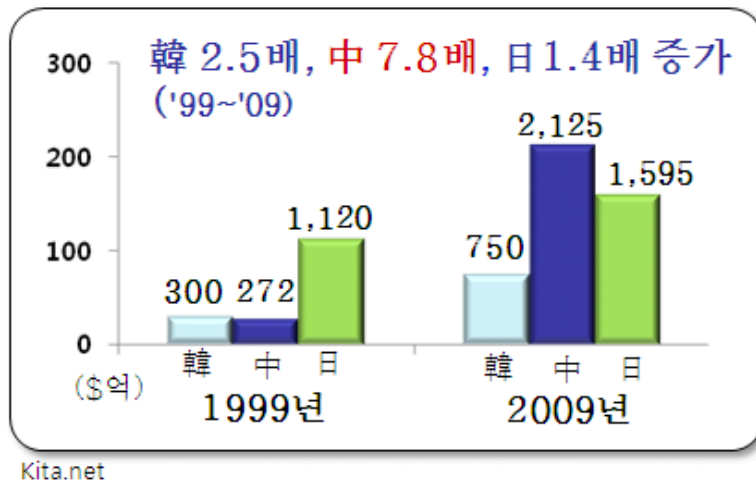
□ 중국은 자국의 서남권 발전과 연계한 경제적 접근 전략으로 동남아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세력 확대 중임

- 중국은 아세안 국가의 對중국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인프라 투자 지원 등 경제적 접근으로 성과를 거둔 바 있음
- 중국은 CLMV(Cambodia, Laos, Myanmar, Vietnam) 등 아세안 대륙권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, 메콩강 유역 개발계획(GMS; Great Mekong Subregion) 인프라 투자에 지원
 - 지난 10년간 중국과 CLMV 국가 간 교역규모가 약 13배 증가하는 등 경제효과 획득
- 중국은 아시아 횡단철도(TAR: Trans-Asian Railway Network) 중 베트남, 태국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를 잇는 아세아노선 철도망을 연결해 인도네시아 등 해양국가 대상의 범북부만 개발협력으로 접근 대상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됨

□ 지난 10년간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교역규모는 약 7.8배 증가한 반면, 한국은 2.5배, 일본은 1.4배 증가에 그침

- 일본은 동남아 시장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가운데, 중국의 영향력과 중화경제권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 강화
- 일본 정부는 베트남, 라오스, 태국, 미얀마 등 동서경제벨트 국가를 대상으로 약 4조 엔(ODA 포함)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등 범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전개
- 동북아 3국의 對아세안 10개국 교역규모를 비교하면 한국은 중국의 35%, 일본의 47% 수준에 불과함(2009년 기준)

<그림 1> 한·중·일의 對아세안 교역규모



□ 중국은 미국 중심의 일극주의(一極主義) 대신 자국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포함한 다극주의(多極主義)를 주장. 이로 인해 중국과 미국 간 헤게모니 충돌 가능

- 중국은 중화 4국, 동남아 화교, GMS 경제권 등을 기반으로 자국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상. 이를 통해 중화경제권 확장과 위안화의 기축통화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

□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, 인도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주창

-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과거 부시 정부의 아시아 경시정책에서 아시아 중시정책으로 전환
- 미국은 자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 9개국 간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(TPP; Trans Pacific Partnership)을 더욱 강화할 전망. 한편 일본도 TPP 참여의사를 표명할 예정

□ 일본은 미국 중시 및 중국 독주 견제 정책을 병행하며 동아시아 이니셔티브 탈환을 위해 전력투구

- 역내 중국 의존도 심화 속에 對일본 희토류 수출 전면 중단, 관광 중단 등 중국의 경제적 위협 가중. 일본은 중국의 역내 영향력 저지에 한계가 노출됨
- 최근 몽골과 희토류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미일 센카쿠 탈환 합동훈련을 계획하는 등 대중국 정책의 변화 가시화

□ 한국은 중-미 환율전쟁 및 중-일 영토전쟁 등 패권 다툼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

- 한국의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2009년에 26%를 기록. 과거 한-중 마늘과동 이후 보복 관세, 수입 중단, 자원 수출 제한 등 중국의 경제력 행사에 예민한 상태
- 글로벌 달러 약세로 지난 2월 이후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외국인 순매수 증가 추세에 원화도 빠른 속도로 절상되고 있음. 한편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 외환시장 개입이 곤란한 상황
- 한국은 환율·무역·자원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입선의 다변화, 자원 확보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

Ⅲ. 국내 철강산업의 ECFA 파급영향

□ 한·일·대만(韓·日·臺) 3국의 중국 철강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9년 71%에서 2009년 54%로 17% 감소

- 한국은 20.1%에서 14.8%로, 대만은 19%에서 9%로 대폭 감소한 반면 일본은 31.7%에서 30.1%로 일정 수준 유지

- 철강 부문에서 한국의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1999년 18.5%에서 2009년 23.3%로 4.8% 높아진 한편 일본은 13.1%에서 26.8%로 13.7% 증가

□ 대만에 대한 중국의 관세인하 품목 총 539개 중 철강은 22개 품목 (2009년도 기준으로 한국 8개, 대만 14개 우위)

- 대만의 對중국 수출 조기자유화 철강 품목은 PO(1), HR(2), CR(3), EG(1), CG(1), 선재(1), STS(12), 전기강판(1) 등 총 22개임(HS 코드 8자리 기준)
- 대만의 對중국 수출 조기자유화 22개 품목에 대한 국가별 시장점유율은 한국 24.9%, 대만 15.4%, 일본 30.6% (물량기준).
- 한국과 대만의 주력품목 중복에 따른 한국산의 대만산 대체로 대만의 위기의식 고조 속에 대만의 7.1% 관세수혜로 시장잠식 우려
- 철강 22개 품목에 대한 국가별 對중국 수출액 비중은 한국 43.5%, 대만 43.3%, 일본 30.3% 등. 대만의 對중국 수출액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조기 개방 추진
- 국가별 對중국 주력 수출품목은 한국 CR·EG, 대만은 HR·CR·CG, 일본은 HR·EG·CG 등

<표 1> 주요 철강 품목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

품목	명목관세 (%)	2009년도 품목별 시장점유율 (%)		
		한국	대만	일본
EHP 22개	7.1	24.9	15.4	30.6
CR ⁽¹⁾	3	35.8	9.1	8.6
EG	8	29.3	10.5	57.2
CG	4	20.6	27.9	46.6
STS박물	10	20.7	22.2	41.4

Kita.net(물량기준), EHP(Early Harvest Program), (1)두께 0.5~1.0mm

□ 대만의 對중국 수출 관세수혜로 예상되는 가격경쟁력 향상효과
 과는 톤당 약 \$51 (STS \$203, EG \$58, CG \$27)

- 2012년 1월부터 조기자유화 22개 품목의 관세철폐로 10%의 고(高)관세 품목인 STS 박물 및 칼라강판용 GI 등을 중심으로 한국산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됨
- OA기기 및 LCD용 EG는 대만 공급능력 한계로 기존의 주력 공급선인 일본의 반사이익이 예상됨

<표 2> 중국의 對대만 EHP 철강제품 품목별 관세인하 일정

품목 수	2009년도 수입세율(x%)	2011.1	2012.1
8(PO, HR 2, CR, CG, STS 3)	$0 < x \leq 5$	0	0
14(CR 2, EG, STS 9, 선재, 전기강판)	$5 < x \leq 15$	5	0

ECFA 협정문 및 부속서

□ 대만의 對중국 수출물량 증가 및 수요산업의 현지생산 확대
 등으로 설비 신·증설 및 대일본 반제품 수입증가 전망

- 대만의 對일본 수입물량 중 잉곳(Ingot) 비중 2009년 66%에 달함
- 대만의 대형 철강사인 CSC(China Steel Corporation)의 신규 가동 예정 설비는 6고로(2010.12), 3냉연 150만 톤(2011.2) 등

IV. 종합 및 시사점

□ 중-대만 간 ECFA 체결 및 관계개선으로 LCD 등 일부 산업
 과 철강에서 對중국 수출 감소 및 가격인하 압박이 가중 전망

- 중국은 세계 최대 LCD 소비시장으로 국가별 LCD 수입시장 점유율은 한국 38%, 대만 33%, 일본 10% 등으로 특히 한국-대만 간 경쟁이 치열

- 양안 관계 개선으로 중국 대형 텔레비전세트 업체와 대만 3대 패널업체 간의 대량구매 활성화. 중국의 시장, 대만의 생산기술에 일본의 핵심기술 가세로 중·대·일의 3국 간 공조 예상
- 향후 대만산 LCD 패널의 무관세가 예상되는 가운데, 한국 업체의 중국 내수점유율 감소, 중국 패널사업 진출 불확실 등 어려움 예상
- 중국 내 로컬업체와의 공급채널 강화 및 중국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과 병행한 고부가 산업용 강재 개발로 value chain 선점
 - STS · CG의 경우, 제품 차별화 없이 중국 및 대만과의 경쟁에서 생존 불가능
- 국가 R&D 정책과 병행한 기술개발 및 정책제안을 위해 정부와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(World Premier Materials 등)

□ 천연자원의 보고(寶庫)인 인도차이나 지역 선점을 위해 인프라 등 투자 확대 가속화

- 중국의 중화경제권 확장에 대비, 인도네시아 · 베트남 · 인도 등 전지기지화 가속화
- 라오스, 미얀마 등 CLMV 국가는 원유,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對중국 교역이 13배 증가한 반면 한국은 약 5배 증가에 그침
- 라오스는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 움직임, 중국 부주석 방문 등으로 관심이 고조. 수력, 풍력 등 에너지 사업성 충분. 수요업체와 CLMV 국가 동반진출로 자원확보 및 고객 Lock-in
- 베트남 ·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자원보유 MAVINS 국가로 자원 및 에너지 확보 위해 파트너 관계 구축

□ 한·중 및 한·일 FTA 논의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조립금속, 자동차 등 관련 수요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필요

- 중국 내 한국계를 포함한 외자기업의 對한국 수출 증대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

- 2011년 FTA 본격 협상에 대비해 관세 조기철폐 위한 조기수확프로그램, 투자 자유화, 지적재산권 보호,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구체적인 협상 가이드라인 조기 마련 필요

□ 경제적 위험요소들의 복잡성(Complexity)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 시나리오를 수립하고, 열강 간 가교리더십을 통한 입지 강화 필요

- 무역분쟁 확산 가능성에 대비, 철강산업 차원의 동아시아 통상협력 강화

<참고 문헌>

1. “동남아에 대한 중국 전략: 현황과 대응”, JPI 정책포럼, 2010. 3월호.
2. “부상하는 아시아 유망 시장 & 산업”, Global Business Report 10-011, Kotra, 2010.
3. “중-대만 ECFA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”, KOTRA, 2010.
4. “중국-대만 ECFA 협정문 및 부속서”, 2010.
5. “한반도 정세보고서”, 삼성경제연구소, 2010.
6. “ISSB World Steel Exports”, ISSB, 2010. 6.
7. <http://kita.net>
8. <http://www.kotra.co.kr>
9. <http://www.steeldaily.co.kr>

정경희 (e-mail: khjung@posri.re.kr)

☞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.